Major Media News Coverage (International Seminar hosted by Pension Research Association)

1. NEWSIS (뉴시스. June 21, 20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0_0002781172

외국 석학들 "한국 연금 제도, 지속 불가능…재원 너무 적어"
등록 2024.06.20 22:29:39수정 2024.06.21 01:38:51

연금연구회, OECD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 미래 연금 위한 소요 재원 너무 적게 준비"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모습 (사진=연금연구회 제공) 2024.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외국 석학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연구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과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를 보면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이고,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에 소진 시점은 5년 전에 비해 2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노동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혔던 연금개혁은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좌절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 43%, 야당은 45%를 제시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쿠르제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는 "한국의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이 훨씬 더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을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들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라일리 파리 OECD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까지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인 조치로, 현재 연금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소 12~1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만 체계적인 구조 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ddobagi@newsis.com

2. Hankyung (Korea Economy, 한국경제신문) (June 21, 20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11912i

한국,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대로면 미래에 연금 못 받아"
황정환 기자

입력 2024.06.21 10:19 수정 2024.06.21 11:05

OECD 연금분석관 "소득대체율 유지해도
보험료율 13% 이상 올려야"

연금연구회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OECD (국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금연구회 제공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상태인 40%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최소 1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내고 더 받는'는 개혁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한

국에선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연금연구회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OECD(국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OECD측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한국의 연금 제도 분석을 맡고 있는 앤드류 라일리 OECD 연금분석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로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이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43%, 야당은 45%를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연구회를 비롯한 재정안정파 학자들은 현 상태에서도 이미 발생한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에 달하는 한국에선 소득대체율 인상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라일리 분석관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거하되,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노년기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토 시즈메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역시 “노인 70%를 커버하는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식으로 '낸 만큼 받는' 연금으로 개편하고, 부족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의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조실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미래 연금 지출액 충당을 위해 현재 소득에서 너무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 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

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은 여야 간 대립보단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란 제언도 나왔다. 헤르만 쿠르제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는 “노르웨이는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이 여러 선거기간에 걸쳐 있는 장기적 문제란 점을 폭넓게 이해한 덕에 정치적 반발 없이 연금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매우 투명하게 또 중립적인 성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 큰 규모 개혁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빈곤율을 주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죠지 쿠르드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박사는 “호주는 순소득만으로 측정한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지만 자가주택(비용 및 추정 임대료)을 고려하면 10% 이하로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3. inews24 (아이뉴스24. June 21, 2024)
https://www.inews24.com/view/np/1733126

OECD 연금 전문가들 "한국 연금체계 지속 불가능“

김보선 기자 입력 2024.06.21 09:49 | 수정 2024.06.21. 11:07

"정치권 이해관계 매몰되면 최악 상황 올 것"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외국 석학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 반발 없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해 관계에 사로 잡혀 전문적인 논의를 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21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의 외국 석학들은 성공적인 개혁 사례와 국내 상황 등에 비춰 연금개혁에 관해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 개혁' 안을 놓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 왔다. 이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를 종료하고 22대에서 원점 재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앤드류 라일리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최근 "국민연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기여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13%까지 올리는 방안은 추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진단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환영한다. 상한 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카 비드룬트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은 재정적 안정성과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료는)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지연될 경우에 미래 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 한국의 연금 기여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죠지 쿠드르나 박사는 "한국은 공적연금 지출은 낮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다"며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통계청 헤르만 쿠르제 박사는 정치권 연금개혁 논의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여러 선거 기간에 걸쳐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한 정치인들의 폭넓은 이해 덕분에 노르웨이는 정치적 반발 없이 여러 연금개혁을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투명하게, 또 중립적인 성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적 해결책을 함께 찾음으로써 큰 규모 개혁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정치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공통된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자들이 충분한 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 인구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 여야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50보 100보"라고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핀란드식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후, 숨 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식의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4. edaily (이데일리. June 21, 202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9846638924016&mediaCodeNo=257&OutLnkChk=Y

최악 저출산 韓 향한 경고…"미래에 연금 받기 힘들다“

연금연구회 OEDC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
연금전문가들 9→13% 이상 미미 15% 이상 올려야

등록 2024-06-21 오전 10:57:42
수정 2024-06-21 오후 1:02:3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래의 연금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현재 소득에서 너무도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 실장은 핀란드 연금추계분야를 총괄하는 연금 전문가다. 리스쿠 실장은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연금요율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동결된 상태다. 현재 소득대체율 42.5%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3년 286만원) 기준 40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기간은 18년, 미래에도 25년 남짓한 상태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9만원씩 국민연금을 18년간 납부하고 매달 42만5000원씩 받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연금고갈 속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와 함께 점점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적용 합의가 추진됐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과 함께 모수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카 비드룬트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연금요율 13% 인상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한국의 연금 기여율의 경우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15% 이상으로 더 증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연금(신연금)과 이미 지급 중인 연금(구연금)을 동시에 조정하는 균형 메커니즘을 통해, 세대 간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부담을 배분할 수 있다. 핀란드도 여러 차례 개혁을 했으나, 일부 국가는 핀란드보다 더 급진적인 형태의 구조개혁을 했다. 스웨덴은 확정 급여형(DB)에서 확정 기여형(DC)으로 전환했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한국도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위 두 가지 옵션(핀란드식의 개혁 또는 더 급진적인 스웨덴식 개혁)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개혁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대의 죠지 쿠드르나 박사는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낮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보험료율과 연금혜택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 연금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해 현행 부과식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운영이 매우 수월해 질 수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5. Sedaily (서울경제신문. June 21, 2024)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JURGGX1

OECD 전문가들 “韓 연금 지속 불가능…보험료율 더 올려야”

입력2024-06-21 15:52:49 수정 2024.06.21 15:52:49 세종=주재현 기자

연금연구회-안철수 의원, '연금전문가 국제세미나'
“보험료율 인상 논의 긍정적이지만…충분하지 않아”
“현 상태 지속 불가능하다 확신”…가입자 기여 늘려야

연금연구회 회원들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금연구회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해외 연금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이 기존에 나온 추계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주도하는 연금연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핀란드·노르웨이·호주·일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을 경험한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지나 국회에서 논의됐던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안과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3%'안은 말 그대로 50보 100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앤드류 라일리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3%'안에 대해 "가입자의 기여(보험료 납부)를 추가할 필요성을 인식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다만 이정도 인상폭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호평했다. 앤드류 연금분석관은 OECD가 매년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의 공저자다.

연금 추계 전문가인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는 현재 시점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현재 시점에 너무 적게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핀란드는 규칙기반 안정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핀란드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6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면서 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미카 비드룬트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은 "핀란드는 다양한 경제 충격에도 연금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제안된 13%가 아니라 15%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헤르만 쿠르제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 역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쿠르제 박사는 "한국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지 쿠드르나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수급자들의 자산까지 고려해 지급하는 호주의 기초연금 제도를 소개했다. 평균 소득의 30% 정도 금액을 최대 연금액으로 설정하고 수급자를 정할 때 수급자들의 자산 보유 수준까지 고려한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월 소득은 적더라도 주거 비용이 들지 않거나 부동산 자산을 조금씩 유동화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이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은 호주 고령 세대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쿠드르나 교수는 "호주의 고령 세대 중 25%는 수급조건에 부합하지만 (자산조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며 "이 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액은 3%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이처럼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더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입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을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은 12%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령 세대 역시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호주의 제도를 참고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82.4%, 호주가 67.9%였다. 두 나라 모두 순소득으로 측정한 노인빈곤율은 상당히 높지만 부동산 자산을 고려할 경우 10%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재현 기자
경제부
joojh@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JURGGX1

6. newspim (뉴스핌, June 21, 202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1000813

OECD 연금전문가 "한국, 의무납입연령 연장하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기사입력 : 2024년 06월21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 06월21일 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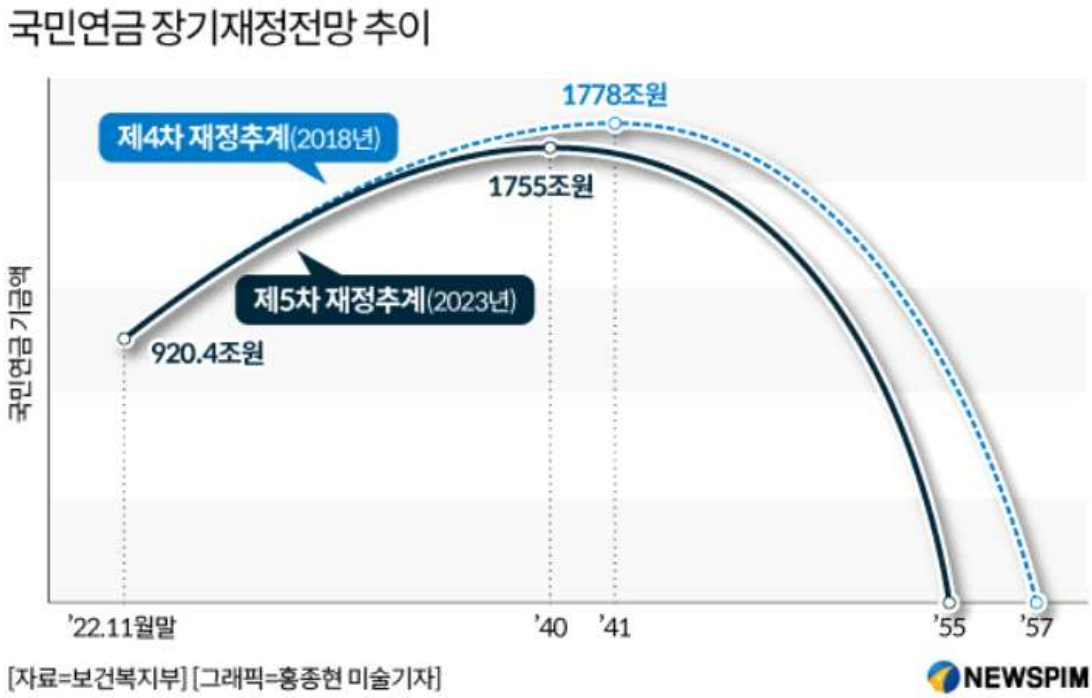
연금연구회, OECD 회원국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 연금액 불충분…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기초연금 개혁 먼저…취약계층 중심 개선해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12~15%까지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상한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즈모 리스쿠(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연금 제도에 대해 "한국은 미래의 연금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현재 소득에서 너무도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미카 비드룬트(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금 기여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개혁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며 "해외의 여러 국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헤르만 쿠르제(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0%인 반면에 기여율은 9%에 불과하다"며 "이미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근로 인구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라일리 분석관은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

장하는 방안을 환영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일리 분석관은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라"며 "저소득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table>
<tr><th>구분</th><th>자영업자</th><th>근로소득자</th><th>공무원 등</th></tr>
<tr><td>3층</td><td colspan="3">개인연금(235만명, 7.6%) ※ 세제적격 연금저축('21.12)</td></tr>
<tr><td>2층</td><td></td><td>퇴직연금
(684만명, 22.3%) '21.12</td><td rowspan="3">직역연금
(181만명, 5.9%)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td></tr>
<tr><td>1층</td><td colspan="2">국민연금 (2250만명, 73.3%)</td></tr>
<tr><td>0층</td><td colspan="2">기초연금 (624만명)</td></tr>
</table>

※ 괄호는 18~59세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율,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를 표기('22.12월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마사토 시즈메(Masato Shizume)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70%를 커버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한국이 기초연금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즈메 교수는 "한국 기초연금 운영 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덴마크의 노인인구 기준의 기초연금 운영, 소득비례연금에 주택비용 등을 보충해 주는 보조조항이 포함된 최소 보장연금, 자산조사가 적용되는 호주 기초연금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죠지 쿠드르나(George Kudrna)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대 박사는 "호주 연금체계의 첫 번째 층인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주된 은퇴 소득을 제공한다"며 "정부의 일반 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드르나 박사는 "호주 기초연금의 최대 연금액 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30%에 해당한다"며 "자산조사를 완료한 후 지급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소 12%에서 15%까지 인상을 해야 체계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가 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7. etoday (이투데이. June 22, 2024)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2339

OECD 연금전문가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입력 2024-06-22 05:00 수정 2024-06-22 12:26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연금연구회,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 개최…기초연금도 도마

▲연금연구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외 연금전문가들이 한국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해외 연금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미카 비드룬트(Mr.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개혁안에 대해 "한국 정부 추계에 따르면 재정 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지연되면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죠지 쿠르드나(Dr. George Kudrn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낮은 공적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이 보완하는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료율과 연금 혜택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연금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해 현행 부과식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헤르만 크루제(Dr. 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부 연금추계 담당자는 "노르웨이 연금제도는 부과식 연금제도로, 소득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총 근로소득의 18.1%가 연금 적립금으로 할당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약속된 연금 지급액은 개인 기여액을 훨씬 초과한다. 또한, 이미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이 훨씬 더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사토 시쥬메(Masato Shizume) 일본 리쥬메이칸대 교수는 기초연금의 과도한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기초연금 운영방식은 기초연금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최저보장을 도입하며, 일자리와 연금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앤드루 라일리(Mr.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도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인 행태를 싸잡아 비판

했다. 안 의원은 '50보, 100보'의 어원을 언급하며 "5월 말까지 한국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안이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였다. 내가 볼 때는 맹자가 말한 '50보나 100보다'와 똑같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식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후 숨 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or Your References>

8. Hankyung (Korea Economy, 한국경제신문) (June 2, 20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299341

[기고] 연금개혁, 100년을 내다보자

입력 2024.06.02 18:35 수정 2024.06.03 00:19 지면 A35

골든타임 놓치면 후대 '빚 폭탄'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목적 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맹자가 왕에게 물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겁을 먹고 한 50보쯤 도망치다가 문득 앞을 보니 100보쯤 도망친 병사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를 보고 ‘이런 비겁한 놈’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왕이 왜 싱거운 것을 묻느냐는 듯 답했다. “50보나 100보나.”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바로 ‘50보, 100보’다. 소득대체율을 43%나 45%로 올려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더라도 연금 소진 시점이 7~8년 늦춰질 뿐이고 막대한 빚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진다. 지금도 2023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1825조원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여야의 중간값)로 바꾸더라도 미적립 부채는 2050년 6366조원(GDP의 123.2%), 2093년 4경 250조원(GDP의 313.3%)에 달하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는가. 지난 국회 막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지만, 이 안은 본인과 진영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한 '개악'일 뿐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의 주된 명분과 논리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높이자'인데, 이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 고소득 계층이 돈을 더 가져가고, 빈곤 계층을 돕는 효과는 크지 않아서다. 노인 빈곤 해결에는 '취약 노령층에 집중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지급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 권고가 훨씬 더 합당하다.

연금개혁의 목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어야 한다. 즉, '부모가 자식들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말자'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지금의 2030세대와 연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미래 세대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30세대와 미래 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을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개혁안이 모두 틀렸다고 누차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좋은 연금개혁 모델은 스웨덴의 확정기여(DC·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이다. 스웨덴은 정해진 보험료에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변동되는 실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이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가장 낫다.

다만 우리는 확정급여(DB·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 방식이기 때문에 핀란드처럼 DB 방식이면서도 자동 안전장치인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스웨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목적이 '지속 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서 논의 과정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면 현재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을 2030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어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된다.

국민은 '왕'이다. 국민에게 우리 정치인들의 행보가 '50보, 100보'가 되면 안 된다. 연금개혁, '50보, 100보'가 아니라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9. newspim (뉴스핌. June 10, 202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09000140

[인터뷰] 보사연 윤석명 박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개혁 아닌 개악"

기사입력 : 2024년 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 06월10일 18:07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주요 선진국 소득대체율 50%? 기준 자체가 달라"
"한국, 기초연금 포함하면 소득대체율 훨씬 높아"
"국민연금 개혁, 기대여명계수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대표단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이래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전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특히 2003년 1차 재정계산위원회부터 지난해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이 도리어 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의미하는 모수개혁안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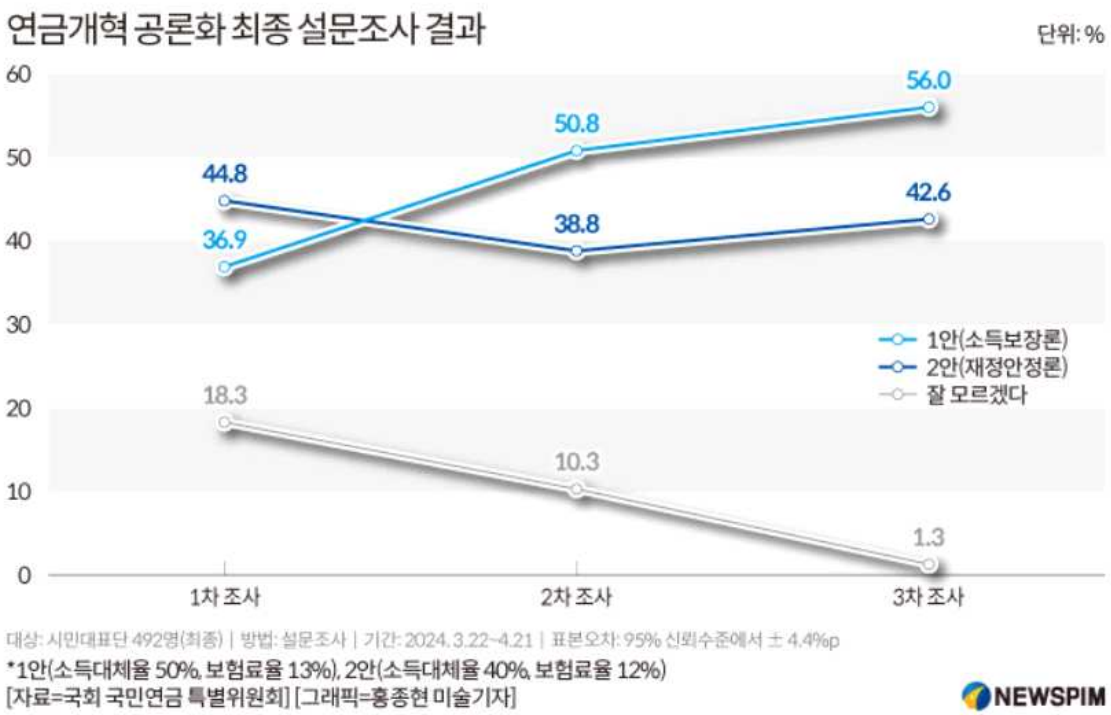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연금연구회] 2024.06.09 plum@newspim.com

윤 위원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현행(9%)보다 6%포인트(p)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것은 제도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게다가 5차 재정계산은 0.7명대로 급락한 출생률이 1.21로 반등한다는 극도의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라며 "초저출산을 가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겠다는 의도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안은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과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이었는데 최종 조사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이다(그림 참고).



윤 위원은 현재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도 재정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세대에서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수지 균형보험료 21.8%를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금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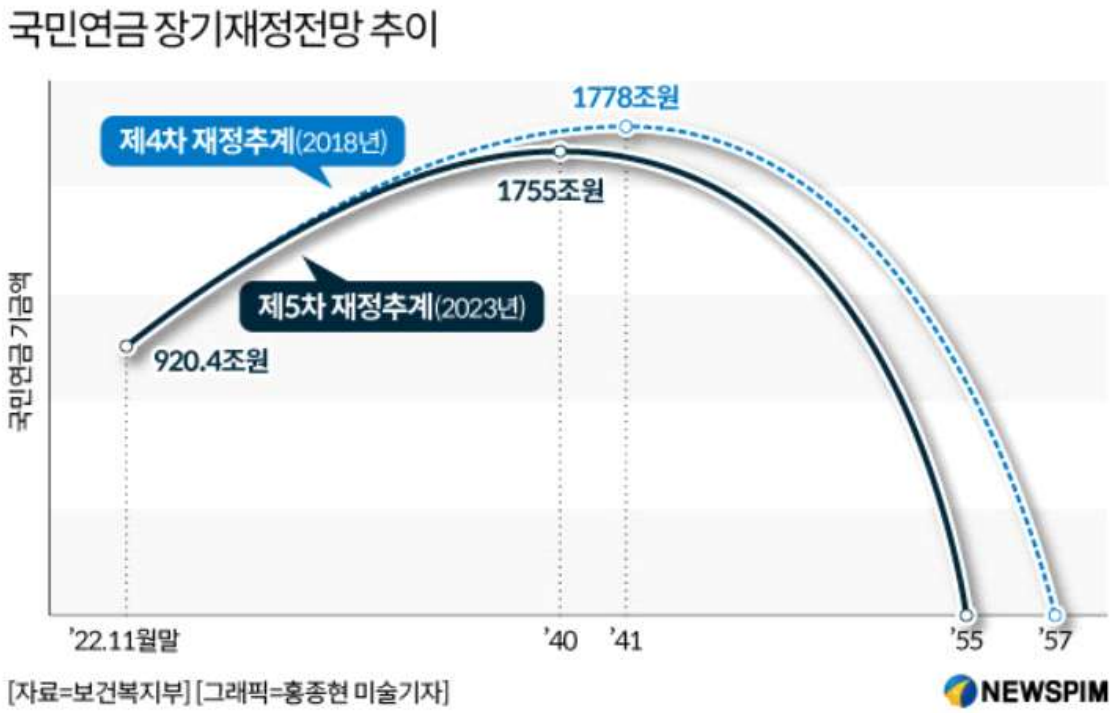
▲연금제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99% 이상이 연금수리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연금수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이 불과 5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재정안정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국민연금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누적적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경1656조원에 달합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제도 속 어떤 착시효과가 더 있는지

▲일단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지 않을 보험료는 19.8%입니다. 1988년 도입했을 때는 3%, 지난 26년 동안에도 9%의 보험료를 더 걷었습니다.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걷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죠. 연금연구회 소속인 한양대 전영준 교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는 1825조원(GDP 대비 80.8%)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이 40~5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것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내에서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이 40%를 훌쩍 넘게 됩니다. 또 OECD와 비교하려고 하면 기준을 맞추고 비교해야 왜곡이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율이 15~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데다 연금 가입기간도 40년 정도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편향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5차 재정계산 당시 대부분 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조합을 지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을 선택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안은 이번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최종 조사 때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이 어긋난 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개편안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확정급여형(DB) 방식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 방안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

연금 안에 있는 복지정책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복지정책은 재정정책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했죠. 연금개혁의 고통을 미래세대에만 전가하지 말고 노년세대도 같이 분담했을 때 올바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plum@newspim.com

10. The Asia Business Daily (아시아경제. June 11, 20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1013434828457

"소득대체율 안 바꿔도 국민연금 '더 받는' 개혁 가능" [이슈인터뷰]
전영주 기자
입력 2024.06.11 06:10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절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두 방안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물려주거나 연금개혁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절충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빚더미를 줄여주진 못할망정 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워 빚을 늘리는 모양새"라며 "소득대체율을 0.1%포인트만 올려도 개혁안 아닌 '개악'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기초연금 등 세금 투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월간·연간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제1~5차(2003~2023)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부터 연금개혁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 했다. 연금의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연금은 어떤 상태인가.

▲연금 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현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적립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2055년 고갈된다. 이때 사라지는 돈은 1755조원의 적립금만이 아니다. 기금운용 수익금과 새로 들어오는 보험료도 없어진다. 둘을 합친 값이 약 1000조원이니 연금이 고갈되면 2755조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40%)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6%포인트 오른 15%로 설정해도 재정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기금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여 미뤄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산값마저 실제보다 낙관적이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30~2040년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21로 반등한다고 가정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0.6~0.7 수준인데 수년 내 2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게 가능할까.

-국회가 제시한 개혁안으로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여야가 거론한 절충안대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4%로 올리면 암묵적 부채가 급증한다. 미래 세대에 더 이상 부채를 떠넘기지 않는, 장기 재정균형 수준의 보험료율을 수지균형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소득대체율이 44%일 때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약 22%다. 절충안(13%)보다 9%포인트 높은 값이다. 반대로 말하면, 미래 세대에 연간 9%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 빚더미를 추가로 물려줄 게 뻔한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빚더미를 줄여주진 못할망정 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워 빚을 늘리는 모양새다. 소득대체율을 0.1%포인트만 올려도 개혁안 아닌 '개악'안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60만원대다. '받는 돈'을 늘릴 방법은 없나.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높이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 상한액은 약 600만원이다. 월급을 600만원 이상 받더라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상당히 낮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연금(860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소득대체율 40%로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어떡하나.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인 빈곤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한 1998년의 스웨덴이 좋은 사례다. 연금정책은 낸 만큼만 받게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고, 사회정책은 세금 투입으로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했다. 한국도 선별적 제도인 기초연금 등으로 노인 빈곤에 대응해야 한다. 노인 빈곤의 핵심이 소득·자산 양극화기 때문이다. 상위 10% 부자 노인은 고도성장의 수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하위 25%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비참한 집단이다. 때문에 보편적 복지인 국민연금으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도 있다. 1~10분위의 예상 가입기간 분석 결과를 보면 가난한 1분위는 19.3년에 그친 반면, 부유한 10분위는 33.9년으로 도출됐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기 때문에 소득대체

율 인상에 따른 혜택은 부유층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도 그 효과가 100% 나려면 약 40년이 걸린다. 지금 가난한 노인이 당장 혜택을 얻을 순 없다는 뜻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재정안정을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을 나누자는 KDI의 안은 어떻게 보나.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KDI의 제안은 연금개혁 시점부터 들어오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에 새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개혁 이전에 낸 구연금 보험료는 따로 운용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구연금에서 재정부족이 발생하면 국고 투입으로 해결하자는 게 KDI의 주장이다. 이는 노년 세대에 면죄부를 준다. 구연금의 재정부담을 나라에서 갚으면 기존 수급자나 수급 개시를 앞둔 세대는 고통을 부담하지 않으니 "고맙습니다" 하게 된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미래에 못 받을지도 모르는 연금 제도를 위해 홀로 2~3배 더 부담해야 하는데, 좋다고 하겠나.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할까.

▲연금개혁 방향성은 최소 30년, 최대 70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를 받아들이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월간·연간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1명에게 평생 동안 지급할 총 연금액은 동일하다.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면 노년 세대도 연금 개혁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동시에 재정안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평균 수명 증가가 재정 불안정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약 20년간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연금 수령기간이 25~30년으로 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1825조원의 암묵적 부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암묵적 부채 규모가 1825조원에서 멈추거나, 늘더라도 조금 증가해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지 않겠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서 빚더미를 더 늘리지 않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나.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외에도 인저리 타임(정규 시합 시간 이후 주심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는 시간)이 있다. 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을 5~6년 늦춘 건 전반전에서 1~2골 넣은 상황과 같다. 아직 후반전은 물론 그 후 인저리 타임도 남았다. 평균 수명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났으니 인저리 타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 이때 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오랜 요구와 압력 끝에 겨우 공개됐다. 연금개혁 관련 회의록을 올리고, 공무원연금도 재정추계 결과 값을 발표해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961년생으로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위원회 위원,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위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명예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11. ASIATODAY (아시아투데이. June 16, 202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16010008051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기사승인 2024. 06. 16. 18:50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윤석열 정부가 오래간만에 일다운 일을 해냈다. 지난 5월 말에 거대 야당 대표, 국회의장, 대부분의 보수 언론마저도 가세했었던 파상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특히 마지막 10여 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 누군가가 그려 놓은 밑그림 아래 총공세를 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문제를 넘기자는 한 보수 언론사 편집인(사장)의 칼럼이 거의 유일했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몰렸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한 유력 보수 언론사는 연금개혁 무산 시 대통령이 책임을 질 거냐는 협박성의 사설을 실었다. 그 언론사는 5월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한 톤의 사설과 칼럼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조차도 국민연금 개악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했었다. 왜곡된 자료 제공, 또 개혁과 개악을 구분조차도 못 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를 개혁안이라고 호도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연금문제 하나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뚝심 있게 잘 버텨냈다고 높이 평가하는 거다.

지난 1년 동안 필자가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칼럼을 썼었던 적도, 또 방송했던 적도 거의 없다. 그러니 필자의 이 칼럼이 뭐 하나 바라는 아부성 발언이라고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것이다. 너무도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소속된 연금연구회는 지난 4월 3일 국회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여 수차례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최대 고비였던 5월 2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5월 28일에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4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단 0.1% 포인트라도 인상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단언했었다. 연금연구회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편안이 통과되는 것을 왜 그토록 막으려 했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논의내용을 보고받던 자리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안을 제시했다면, 등가성 원칙에 따라 다른 대안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안이었어야 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연금수리 관점에서 볼 때, '보험료 1%포인트를 인상한다면 소득대체율은 2%포인트만 인상해야 등가가 된다', 즉 그렇게 해야만 추가로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다.

한쪽에서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안을 제안했으니, 이러한 등가성 원칙을 고려할 때, 단 1%포인트의 보험료만을 더 올리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안이 제시됐어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게 1안으로 제시된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안이, 당시 2안으로 제시되었던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0%'안과는 객관적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즉 극단적인 포퓰리즘 안임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16일 필자와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당시 전화 통화에서 필자가 주호영 위원장에게 했던 말이다. "우리 연금논의 현실이 어찌 이리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르겠다! 소위 자칭·타칭 연금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국회의원보다도 못해서 하는 말이다. 특위 위원장의 이 지적을,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왜 문제 제기조차도 못 했던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주호영 위원장 발언조차도 절반만 타당하다는 점이다. 주 위원장 발언은 우리 국민연금이 여타 OECD 회원국들처럼 수지균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만 타당할 수가 있어서다. '수지균형'이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이 똑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수준의 연금(42% 소득대체율)을 지급하는 OECD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18~20% 수준이다. 우리 국민연금이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인 9% 보험료를 부담하다 보니 연금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OECD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가성 원칙에 기반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두 안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 위원장 발언은 절반만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19.8%이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를 19.8% 걷어야 수지균형, 즉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의 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던 그 개편안이 실상은 엄청난 개악안임을 의미한다. 이미 발생한 천문학적인 연금 빚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극단적인 전제하에서도, 개혁 이후에 빚이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안'의 경우 최소 21.8%를 걷어야 한다. 21.8%를 걷어야 하는데, 13%만 걷으니 8.8%포인트나 적게 걷음으로써, 매년 그만큼의 연금 빚이 더 늘어난다. 2050년의 국민연금 미(未)적립부채가 6366조원으로, 단 27년 만에 3.5배나 급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개악 중에서도 개악인 안을 개혁안이라고 호도하면서, 국민과 언론을 기망했었다. 극히 소수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이 가세하면서, '개악안을 받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를 총공격했던 것이 지난 5월의 마지막 10일이었다. 그러니 당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다. 개악안을 개혁안으로 호도하면서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었던,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주도했던 집단을 역사의 청문회에 올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해야 해서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